



# “여론몰이”로 공무원을 벼랑 끝으로

## 정부의 속내

- ▶ **현재**: 지방선거 후 연금논의 본격화, 끊임없는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
- ▶ **내년**: 재정 재 계산후 법 개정, 대대적인 개혁 작업 추진

##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만들어 버린 정부

- ▶ 매일 평균 3~4건 중앙방송과 중앙지에 도배
- ▶ 공무원이 국민세금 강탈(혈세로 보전)
- ▶ 공무원과 군인은 낸 돈의 3배 이상 가져간다.
- ▶ 공적연금을 하루빨리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- ▶ 연금 때문에 부담할 미래의 부채가 1천117조원의 절반 596조원 발생(2013국가회계결산서)

##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공무원

우리는 누구를 믿고 일해야 하나.

(정부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.)

정치활동금지! 영리활동금지! 겸직금지!

과실로 인한 2중 처벌! (형사벌, 행정벌)

- ▶ 596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처럼 거짓으로 꾸미고, (공무원과 정부의 납부액은 빼고, 모든 공무원이 일시에 그만두고 기존수급자와 20년간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언론에 흘려 선동)
- ▶ 정부의 부당사용금 6조 9천억(현재 가치 20조)은 왜 안 갚고 있나. (갚을 여력도 없겠지만.)
- ▶ 공무원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! (연금감소분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 가입하면 연금 이중가입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예상)

# 공무원 연금!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?

## 1960년 최초의 공적연금 -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

- ▶ 1949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연금제도의 근거 신설
- ▶ 한국전쟁으로 인한 재정 궁핍 상황에서 제도 창설 지연
- ▶ 1960년 최초의 공적 연금으로서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

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시 국가 및 개인이 납부한 부담금 및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기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연금의 근본 개념이다.

###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

- ▶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  - 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
  -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(공중보건의사, 보건진료원, 공익법무관, 징병전담의사, 사법연수원생 등)
- ▶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일부 직원
  - 청원경찰, 청원산림보호 직원
  -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위원으로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자
  - 기타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
- 제외대상: 군인, 선거직공무원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등)

구분	종류	사유
퇴직급여	퇴직연금, 퇴직일시금 등	퇴직, (일반)사망시
유족급여	유족연금, 유족일시금 등	
퇴직수당	퇴직수당	1년이상 재직후 퇴직, 사망시
재해보상급여	공무상요양비, 장해연금, 유족연금, 순직유족연금	공무상부상, 질병, 장애, 사망시
부조급여	재해보조금, 사망조위금	재해발생시

## 2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?

구분	공무원 연금 ('10.1.1 개정)	국민연금 ('07.7.3 개정)
제도 일반	① 도입시기	1960년 1월 1일
	② 제도성격	노령연금+퇴직금+인사정책
부담	③ 부담률(보험료)	공무원: 7%, 국가: 7%
	부담금산정기준	기준소득월액(과세소득)
급여	급여종류	퇴직연금 등 19종
	④ 퇴직연금 산정기준 ∴ 소득재분배기능	(A+B)/2 A: 전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 B: 개인의 전 기간 평균소득
	⑤ 지급률	2.1% → 1.9%
	연금지급개시연령	60세(법 개정 이후 신규 임용자는 65세)
	급여제한	있음(형벌 등 최대 1/2 삭감)
	수급요건	20년 이상 재직
		10년 이상 가입

좌측 하단의 표만 보더라도,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으며 연금제도의 성격상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과 인사정책 부분 즉 급여제한과 같은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 국민연금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. 또한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 개인 부담금이 2.5% 높은 것과 국민연금은 퇴직금과 별도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,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되어 공무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특수성은 완전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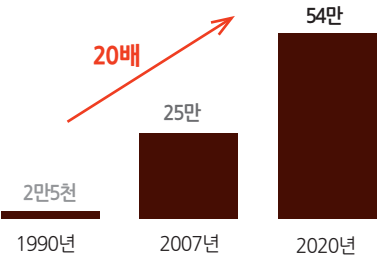
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이유는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즉 노동3권 제약,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, 정치활동 불가, 민간보다 낮은 보수, 품위유지 의무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위반시 징계 등 공직 박탈, 연금도 1/2까지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공무원 연금을 결정하였음에도 언론이나 납세자 연맹 단체 등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적자 보전으로 공무원 연금이 “세금 먹는 하마”라는 식의 보도로 공무원 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조차 없는 환경에 이른 것이다.

평생 연금 하나만을 바라보고 낮은 보수를 받고 묵묵히 공직생활을 임한 분들의 한탄섞인 어조가 여기저기 들리는 이유다.

## 3 공무원 연금의 재정악화 원인에 대하여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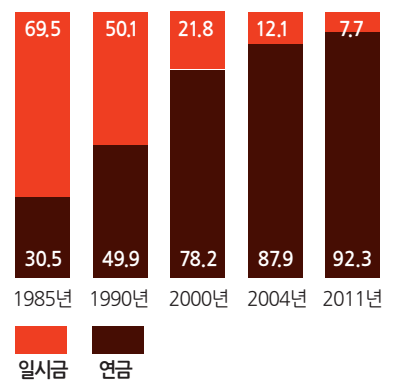
### 1.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

공무원 연금 도입시 평균수명이 너무 낮게 잡음으로써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정책의 오류이다.



### 2. 연금 선택 비율 상승

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선택 비율 또한 일시금이 아닌 연금 선택으로 바뀌고 있으며, 2011년 통계를 보면 일시금(7.7%)보다 연금(92.3%)을 대부분 선택함을 알 수 있다.



### 3. 외국 정부 대비 낮은 정부 부담률

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률은 일본, 미국, 독일, 프랑스 등의 국 정부의 부담률보다 낮다.

구분	대한민국	일본	미국	독일	프랑스
공무원 부담률	7%	7.3%	6.1%	(없음)	6.1%
정부 부담률	11%	23.8%	23.6%	52.5%	53%
GDP대비 정부 부담률	0.5%	1%	2.1%	1.9%	3.4%

▶ 정부 부담률이 4% 높은 이유 - 퇴직수당+적자분 포함

#### 4. 정부의 연금 기금 부담사용 및 수급자 양산

정부의 재원으로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부담하게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, 정부 부담금을 미납하여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다.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연금 수급자가 양산된 것 또한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라 하겠다.

건명	부담사용 및 정부부담금 미납
'98 IMF 당시 구조조정 (11만여명 감원)	퇴직일시금 4조7,169억원 지급
2005년 철도청 공사화 (3만9천명 퇴직)	퇴직일시금 2,277억원 지급
'83~'00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(정부부담금)	5,863억원
퇴직수당 ('92~'95 정부부담금)	6,144억원
부당사용 및 정부부담금 총액	6조 1,453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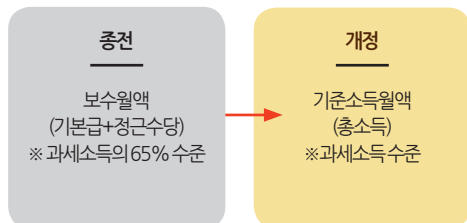
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 수급자 양산

연금 수급자 총수	자연퇴직자	구조조정 퇴직자
34만 5천명	19만 6천명(57%)	14만 9천명(43%)

## 4 | 공무원 연금 어떻게 개정되었나?

### 1. 연금 산정기준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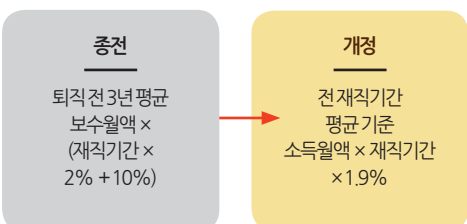
연금 산정기준이 종전에 보수월액(기본급+정근수당 포함)에서 기준소득월액(총소득)으로 변경되었다. 그로 인하여 과세소득의 65%수준이 과세소득 100%로 높아졌음을 위 표에 보듯이 알 수 있다.



개인별 편차가 큰 6개 보수는(성과연봉, 성과상여금, 직무성과금, 상여금,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)직종·직급별 평균액을 반영한다.

### 2. 연금 지급액(지급률) 인하

종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늘어남에 따라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가 산정됨으로 연금 지급액이 인하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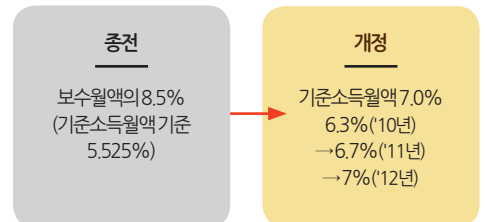
연금산정에 있어서도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'퇴직 전 3년 평균'에서 '전 재직기간 평균'으로 변경하였다. '전 재직기간 평균'은 개정 이후 재직기간(2010년 1월 이후)만을 대상으로 하며, 개정 이전(2009년 12월 이전) 재직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니다.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

원연금공단에 "내연금보기"를 통하여 퇴직금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또한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·유족일시금,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·부조급여 등은 종전 급여 수준이 유지되며, 다만 급여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비율만 조정된다.

### 3.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

연금재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기여금 및 정부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.



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 기여금 인상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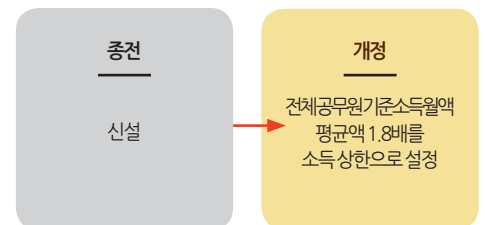
기여금 인상예시: 8급 10호봉 기준(단위: 원)

보수월액	과세소득액	부담예상 기여금				
		5.52% (현재)	6.0% (09년)	6.34% (10년)	6.67% (11년)	7.0% (12년)
1,618,050	2,489,300	137,530	149,360	157,820	166,040	174,250
예상 기여금 부담	증가액 (08년대비)		+11,830	+20,290	+28,510	+36,720
	증가율		8.6%	14.8%	20.7%	26.7%

주) 보수인상 및 호봉승급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 비교함

### 4. 연금 산정시 소득상한제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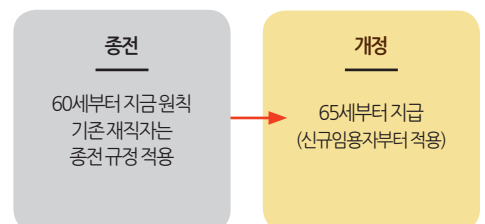
매년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.8배를 초과할 경우 평균액의 1.8배를 기준으로



연금 및 기여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.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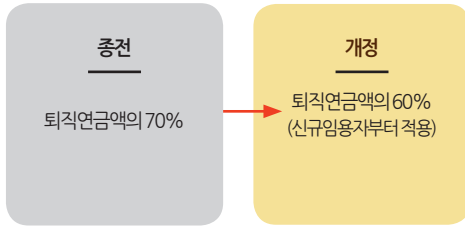
### 5.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

기존 재직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만, 법시행일 이후 (2010.1.1 이후) 신규 임용자부터 65세로 상향조정되어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. 하지만 법 시행일 이후 임용자라고 하더라도 개정이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자로 간주하여 60세부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

## 6.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

기존 재직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종전의 규정인 퇴직연금액의 70%를 지급했으나, 법 시행일 이후(2010.1.1이후) 신규임용자부터는 퇴직연금액의 60%로 유족연금 지급률이 조정되었다. 다만, 법 시행일 이후 임용자중 개정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자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액의 70%를 적용받는다.



## 7. 기타 개정된 사항

소득 심사제 강화	-현행 연금법에 있는 제도인 소득심사제 강화 -연금감액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 (10%-50% → 30%-70%) <b>&lt;해설&gt;</b> 소득심사제: 퇴직 후 연금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-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(07년 268만원)을 초과하는 소득(연금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)에 비례하여 최고 1/2까지 연금에서 감액(1/2초과할 수 없음)		
	초과소득	지급정액(현행)	지급정액(수정안)
	50만원 이하	초과소득액 × 10%	초과소득액 × 30%
	50만원 초과~100만원	5만원+(50만원 초과소득액 × 20%)	15만원+(50만원 초과소득액 × 40%)
	100만원 초과~150 만원	15만원+(100만원 초과소득액 × 30%)	35만원+(100만원 초과소득액 × 50%)
	150만원 초과~200 만원	30만원+(150만원 초과소득액 × 40%)	60만원+(150만원 초과소득액 × 60%)
	200만원 초과	50만원+(200만원 초과소득액 × 50%)	90만원+(200만원 초과소득액 × 70%)
형벌시 연금감액 관련	-(현행):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받았을 시 연금 감액 -(개정): 연금감액 제외 대상에 직무상 관련없는 과실범 외에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범의 경우도 감액대상에서 추가 제외		
재직기간 합산하용	-(현행):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 -(개정): 정부안에 추가하여 기 퇴직자, 재직기간 합산을 2006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 추가 (1996년~2005년 퇴직자에게도 합산하용)		

연금액 조정기준 변경	- (현행): 물가인상률 + 정책조정 - (개정):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만 조정하되, 이행기간 기간 단축(10년 → 5년)
순직보상 인정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 보상금 확대	- (현행): 재해현장에서 사망시에만 인정 - (개정): 화재진압 출동 귀소 중 사망시에도 인정 * 순직유족보상금: 1억3천만원 → 1억5천만원

**정부는 이제 1.4시대 행정은 그만하고**

**3.0시대에 맞게 즉각 대화하라!**

**꿈수 부리지 마라!**

**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!**

**우리**에게 퇴직금이 있습니까? 월급을 많이 줬습니까?  
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?

지난 시절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무원 급여 수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이없음에 현실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. 이때 공무원 급여수준이 민간의 93%였음을 누가 아는가?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든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진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97%까지 현실화 되었으나, 그것도 잠시... (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민간의 100%수준을 지킴) 결국, 전 정권 말기 1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임금 대비 84%수준까지 곤두박질 시켰던(교원 제외 시 76%)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돈 구할데가 없으니, 언론과 시민단체를 앞세워 공무원 연금을 깎아 선심성 복지제도를 유지하려 하는가?

방만한 국가경영의 피해를 결국 공무원에게 전가시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?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?

**우리는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.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!**  
**100만 공무원과 연금수급자들의 생존권은 지켜질 것이다!**

**10만원 투쟁기금 한번으로 백만원(매월)되는 연금박탈 막아내자!**

## “연금개악 저지투쟁”

**우리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해 대동단결 하며, 100억원 투쟁기금을 조성한다. [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]**

**※ 연금투쟁기금모금방법: 원천징수동의서 서명후 급여 일괄공제(연말정산시: 지정기부금 적용)**

※ 2008년도 대정부연금 투쟁시 기금 136억을 성공적으로 모금하고 강력히 투쟁하여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었음.

(중앙지 1종 단 1회 전면광고 비용: 약 1억원 소요됨)

※ 연금개악 대국민 언론홍보 및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할 기금 모금은 **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공무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**

“모금액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 투쟁본부 기금으로 편성되어, 연금개악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위하여 연맹 연금투쟁위원회 주관 아래 빈틈없이 투명하게 쓰여질 것입니다.”



**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**

(702-702)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Tel. 053-603-3920 Fax. 053-603-3929